

월요광장



심옥숙
인문지행 대표

어느 사회든 사람들이 공동체 관계 속에 사는 한, 분배의 문제는 중요하고 예민하며 그만큼 어려운 것이다. 잘못된 분배는 심각한 갈등과 파괴적 분열을 일으키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믿음마저 집어삼키기 때문이다. 그런데 분배의 의미를 전문적이고 복잡한 이론과 설명을 잠시 덮고 단순히 본질만 보면, 분배란 노력과 노동을 통해서 얻은 각자의 몫을 다른 사람이 빼앗지 않고 노력한 당사자에게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왜 분배 문제는 늘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가? 그 이유는 분배의 기본이 무시된 채 자신의 몫보다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욕망하고 이를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데에 있다. 그래서 '각자의 몫'의 의미가 보는 눈과

부당한 분배에 대한 아킬레우스의 분노

힘이나 위치에 따라 달라지고 왜곡된다. 나의 몫과 타인의 몫을 재는 저울이 다른 것이다. 이러한 파행적 분배와 권력의 관계 그리고 원칙과 공정성이 무너진 불행한 분배의 문제가 고전 '일리아스'를 읽는 하나의 갈래다.

서양문화의 원형이라는 '일리아스'는 트로이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다. 그리스의 왕비인 헬레나를 트로이 왕자 파리스에게 빼앗기자 영웅 아가멤논을 총사령관으로 하는 그리스 동맹군이 트로이를 공격한다. 그런데 막상 그리스군은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지지부진한 전쟁을 된다. 가장 큰 이유는 그리스 연합군의 영웅들 사이에서 생긴 갈등 때문이었다. 당시의 전쟁은 적국을 지배하는 목적 이외에도 많은 물자와 노예들을 전리품으로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했다. 그런 만큼 전리품의 분배는 전쟁의 승리를 좌우할 만큼 결정적인 일이었다. 그런데 최고의 권력자인 아가멤논은 아무도 납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자신의 전리품을 챙긴다.

아가멤논은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취해서 분배의 원칙보다 우선하는 급기의 경계를 넘는다. 아폴론의 신전을 지키는

사제 딸을 자신의 전리품으로 만든 것이다. 이런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권력자의 행동은 그리스 진영 내에 심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신들마저 화를 내게 하면서 전염병이 돌게 된다. 그러자 트로이 전쟁의 최고 영웅인 아킬레우스는 아가멤논을 거세게 비판하고, 아가멤논은 사제의 딸을 돌려보내는 대신 아킬레우스의 전리품인 브리세이스를 빼앗는다. 분노한 아킬레우스는 더 이상 트로이군과 그리스의 피해는 겹잡을 수 없이 커지고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다. 신들의 뜻으로 아킬레우스의 참전이 없는 트로이 전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아킬레우스가 자주 사용하는 '명예의 선물'이라는 표현이다. 그는 자신의 전리품이 단순한 포상이 아니고 자신의 명예를 보충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의 전리품을 통치권자가 권력을 통해서 빼앗아가는 것은 아킬레우스가 지켜온 삶의 가치이자 목적인 명예를 짓밟는 것이다. 그리고 죽음을 각오하고 싸운 동지를 멸과 모욕으로써 공개적인 웃음거리로 만드는 일이다. 이제 아킬레우스에게 남

은 것은 영웅의 명예 대신 견딜 수 없는 치욕감과 수치심뿐이다. 그 감정을 아킬레우스는 이렇게 토로한다. "이토록 무서운 슬픔이 나를 사로잡은 것은 어떤 자가 나타나 더 큰 세가 있다고 해서 자기와 동등한 나를 약탈"하기 때문이며 "뒷전에 처져 있는 자나 열심히 싸우는 자나 똑같은 몫을 받고 비겁한 자나 용감한 자나 명예의 수치이며, 부당한 분배는 정의의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로부터의 소외라는 것이다.

함께 살아가는 누군가를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분배로 인해서 스스로의 삶을 수치스럽게 여기도록 강요하는 것만큼 잔인한 일이 또 있을까? 아킬레우스가 목숨을 잃을 운명에도 전쟁에 나간 이유는 공동체적 삶과 미래에 대한 책무와 명예로운 삶을 위한 것이었기에, 이를 부정하는 권력에 대한 그의 분노는 슬픔마저 담고 있다.

노력과 노동이 무의미하고, 필요보다는 욕망을 위한 분배가 일으키는 슬픔과 분노가 고전 속 이야기 아니고 우리가 사는 현실 곳곳에서 깊숙하게 뿌리내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렵다.

社說

클럽 구조물 붕괴 사고 이번에도 인재였다

광주 서구의 한 '클럽'(술도 마시고 춤도 출 수 있는 주점)에서 철제 구조물이 무너져 두 명이 숨지고 외국인 등 스물다섯 명이 다쳤다. 그제 새벽 2시40분께 치평동의 A클럽에서 2층(높이 2.5m)의 선반형 바닥 구조물이 무너져 아래층에 있던 손님들이 깔려 숨지거나 다친 것이다. 부상자 중에는 '2019 광주세계수영 선수권대회' 참가 선수 8명도 확인됐다.

복층 구조물은 기둥 없이 전장에서 지탱하는 구조인데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몰리면서 하중을 이기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 당국과 경찰은 현재까지 A클럽이 안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불법 증축을 하며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사고가 일어난 지점도 불법 증축 공간의 일부다. 사고가 난 클럽에서는 작년 6월에도 복층 강화 유리가 부서져 20대 여성이 추락해 다친 적이 있다. 당시 업주는 입건돼 벌금 200만 원을 냈지만 경찰과 지자체는 불법 증축 여부에 대해서는 살피지 않았다.

이번 사고 역시 특혜성 조례와 불법 증축 및 관리 부실 등으로 인한, 한 치의 어김도 없는 인재(人災)로 드러났다. A클

럽은 원래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없는 일반 음식점이지만 서구가 2016년 7월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며 이 같은 영업 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당시 서구의회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소규모 일반음식점의 영업행태를 과도하게 규제한다며 이 조례를 통과시켰으며 이때 서구원들이 대표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짚은 업소가 A클럽이었다.

조례는 안전사고 등 위험이 있는 만큼 미리 정한 안전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특히 안전 기준을 잘 지키는지 1년에 두 차례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서구는 이 조례가 통과된 뒤 단 한 차례도 안전 점검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지자체가 불법 증축을 사전에 적발하지 못한 채 조례로 특혜만 주고 안전관리-감독은 사각지대로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당국의 사고 원인은 물론 조례 과정에서의 정치권과 지자체의 유착 문제까지 철저히 파헤쳐 다시는 이러한 후진국형 인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광주를 세계에 알린 수영대회 막은 내리고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어제 폐회식을 끝으로 17일간의 열전을 마치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역대 국제대회 사상 가장 적은 예산에도 알차고 실속 있는 시설 구축과 대회 운영으로 광주의 자력을 다시 한번 세계에 보여 줬다는 평가다.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194개국에서 2537명의 국가 대표 선수단이 참가해 규모 면에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하지만 총 사업비는 2244억 원으로 국내에서 열린 국제 대회 사상 가장 적었다. 말 그대로 '저비용 고효율' 전략으로 세계 5대 메가 스포츠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것이다.

홍행 면에서도 초반에는 부진을 면치 못했지만 중반부터 세계적인 선수들의 수준 높은 경기가 펼쳐지면서 관람객들

이 몰려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각종 선수단과 관람객들은 광주시와 조직위가 마련한 다양한 문화·관광 체험에 참여하며 남도의 맛과 멋을 즐겼다.

대회 성공의 가장 큰 원동력은 시민 참여였다. 3000여 명의 자원봉사자와 1만 2000여 명의 시민 스포터스는 무더위에 경기장 곳곳에서 땀을 흘리며 경기 진행과 응원 등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러한 성공 개최의 유산과 효과를 이어가기 위한 레거시 사업도 촘촘히 준비해 왔을 것이다.

선수권대회에 이어 다음달 5일부터는 전 세계 수영 동호인 5000여 명이 참여하는 마스터스 대회가 펼쳐진다. 남은 일정도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이다.

꿈꾸는 2040



정준호
위면연구원 이사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다. 불행했던 과거라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일제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후유증은 두고두고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의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일본 정부의 한국을 대상으로 한 수출 규제는 과거사 정리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강제 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과 일본군 위안부 '화해·치유 센터'의 해산이 직접적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를 핑계 삼은 자민당의 정략적 계산이 보다 실질적인 이유임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럼에도 일본의 이러저러한 최근의 험한 분위기가 조성은 근본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첫째는 과거 청산의 접근 방식이다. 일본은 한국의 식민 지배 기간 동안 '반인도적 범죄'를 지속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하였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군 위안부와 근로 정선대, 강제 징용이며, 이

일본의 수출 규제를 계기로 본 과거 청산과 정의

들에 대한 인권 유린은 상상을 초월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전쟁이 끝난 후 제대로 된 사죄는 물론, 전범에 대한 처벌도 결코 재판에서 9명을 기소하여 처벌한 것이 사실상 전부이다. 과거 자신들의 범죄, 그것도 인도에 반한 죄를 덮거나 정당화하는데 혈안이 되어왔으며, 한국 전쟁으로 경제적 특수까지 얻었던 일본이 선택한 한국과의 국교 정상화 방안은 과거를 불문해 붙이는 조건으로 경제적 원조를 하는 것이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셈이다.

둘째는 역대 우리 정부의 자세이다. 6·3한일 공욕 회담을 반대하는 전국의 양심적인 인사들의 투쟁에도 불구하고 당시 박정희 정권은 그 회담을 강행하였고, 그대가로 경부고속도로 건설로 상징되는 경제 원조를 받아 왔다. 그 후로 일본의 전쟁 범죄, 식민 지배 과정에서 저지른 반인도적 범죄 행위들에 대한 거론조차 쉽지 않은 세상이 되어 왔다. 심지어 국정 교과서의 곳곳에 식민 사관이 그대로 스며들기도 했다.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는

식을 선택하는 것이고, 어쨌든 나름의 주장을 앞세울 수 있는 것이다.

셋째는 과거 청산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는 문제이다. 6·3한일 협정이나 정선대 협약이나 국가 간의 외교적 절차에 의한 것이므로 인정하는 것은 마땅하다. 그러나 그 협정이나 협약으로 일본의 전쟁 범죄에 대한 사면까지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국가 간의 관계 회복과 이를 위한 경제 지원 등의 문제와 일본이 저지른 전쟁 범죄로 인한 개인의 피해를 보상하거나 치유해야 할 책임의 문제는 엄연히 구별되어야 한다. 이것이 최근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 담긴 의미이다. 따라서 일제의 과거 청산은 국가 간의 관계 못지않게 국민의 정서와 개인들의 피해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선대 협약은 많은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혔고, 실효성을 가질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마땅히 바로 잡아야 한다.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는데 그 불행의 직접 피해 당사자들의 뜻에 반하는 청산의 방법을 국가의 이름으로 강제하는 것 또한 온당치 못한 것임을 이제라도 원칙으로 삼자는 것이다.

넷째는 차제에 기업과 국가가 공동으로 한국 기업의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본격화하는 것이다.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들의 부품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결국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라 '메이드 인 재팬'이라는 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제조업의 많은 원천 기술과 핵심 부품을 일본에 의지하고 있는 기업의 구조적인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이고 직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업과 국가가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한국 기업의 원천 기술과 핵심 부품 및 소재 개발에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이나 이공계 대학의 활성화 정책도 함께 반영되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한 관계의 문제, 원천 기술과 소재 개발을 위한 이공계 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기업의 선순환 투자 등이 함께 반영된 장기 계획과 로드맵이 필요하다.

명분은 없어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에게는 적지 않은 압박이 될 수밖에 없는 일본의 수출 규제는 반일 감정과 정서만으로 대응할 문제가 아니라 '정의'에 기반한 과거 청산의 원칙을 다시 정립하고, 일본이 자국의 기술력과 경제력을 앞세워 한국을 압박하는 관행을 되풀이할 수 없도록 실효적이고 원천적인 대책이 마련될 때 일본의 입장과 자세도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며칠 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입장은 공감이가는 내용이다.

기고



이왕무
동강대학교 토지정보관리과 교수

최근 토지에 관한 기록인 지적(地籍)과 관련해 '공간 정보'라는 용어가 떠오르고 있다. 대한지적공사의 경우 2015년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사명을 바꿨고 지적연구원은 공간정보연구원, 지적연구원은 공간정보교육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또 전국 지자체의 관련 부서인 지적과는 공간 정보과, 서울시립대학교 역시 지적 정보학과에서 공간 정보 공학과로 학과 명칭을 각각 바꿨다.

'공간 정보'라는 말은 주택 내의 공간 정보나 리모텔링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지상·지하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 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 결정에 필요한 자원으로써 공간 정

전문 인력 확보에 비상 걸린 지적 재조사 사업

보를 의미한다.

이같은 공간 정보 산업 분야도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우수한 국토 공간 정보 관리 분야의 전문 직업인 양성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다.

지난 2012년 3월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시행으로 지적 재조사 사업이 본격화됐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공간 정보 산업의 토대를 닦는 사업이다. 국토를 새롭게 측량해 정확한 지적 정보를 기반으로 최신의 IT기술과 접목하고, 디지털 지적 정보 제공 등 우리 국토의 디지털 정보 구축을 통한 국토 정보 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견인하기 위해 1조 2000억 원의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중장기(2012-2030) 국책 사업이다.

전국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9년째인 현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사항은 사업 추진 체계의 안정성이다. 즉, 단계별 사업 지구 소요 예산의 적시 확보와 공급 뿐 아니라 각 사업 지구에 추진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성공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다. 중장기적 국책 사업이니 만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서는 계획된 사업 물량에 맞춰

매년 예산을 편성, 배분하고 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의 내용과 대상을 살펴보면 전체 사업 및 소요 비용의 70%는 지적 측량 업무, 사업 지구 지정에서부터 지역주민 교육·홍보 및 동의서 징구, 청산, 성과 및 공부 정리, 지속적인 데이터베이스(DB) 관리 업무 수행 등이 주를 이룬다.

하지만 앞서 제시된 업무 내용을 수행하는 지적 관련 전문 인력의 안정적 확보는 매우 시급한 현안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적 관련 전문가들은 지적 재조사 사업의 중심축인 전문 인력 1만 여 명 확보를 예상했다.

현재까지 지적직 공무원 3482명, 한국국토정보공사 3653명 등 7000여 명이 확보됐고 앞으로 이 분야에서 3000여 명의 전문 인력을 선발해야만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13년부터 지적직 공무원의 신규 채용 인원을 계속 늘려가고 있고 2019년에는 이전보다 두 배 가까이 증원해 479명을 채용했다. 올해 전 남에서는 55명을 선발했다. 또 지적 재조사 사업을 위한 전문 인력 수급의 한 축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도 올 6월 신

규 인력 296명을 선발했고 11월 하반기 채용에서도 100여 명을 뽑는 등 향후 지속적으로 점진적인 전문 인력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현재 지적과 관련해 전문 인력을 교육하는 대학의 경우 4년제 대학은 목포대학교를 포함한 세 개 대학, 2년제 대학은 동강대학교를 비롯한 여섯 개 대학이 관련 학과를 개설해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이들 대학에서 매년 78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 동강대학교의 경우 1978년 토지정보관리과로 관련 학과를 개설했고 2020년부터 지적과로 학과명을 변경해 국가 주요 정책에 부합하는 지적 재조사 사업을 비롯한 공간 정보 산업 전문 인력 양성에 전념할 계획이다.

국가가 국민의 정확한 주민 등록 정보를 가지고 있듯이 국토의 정확하고 다양한 토지 관련 등록 정보도 확보해야 한다. 또 이를 등록한 도면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책무가 있다. 이 같은 대명제 아래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전국 지적 재조사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기 위해서는 지적 관련 전문가의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無等鼓

등장인물과 장소가 바뀌기는 하지만 인류 역사에서는 비슷한 사건이나 흐름이 끊임없이 되풀이된다. 이는 지구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행동 유형이 과거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사람들이 속해 있는 국가나 민족의 지정학적 위치가 거의 변하지 않고 있는 것도 역사가 반복되는 배경으로 꼽힌다.

'군주론'으로 유명한 마키아벨리도 1531년 출간한 저서 '로마사 논고'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미래를 내다보려는 사람은 반드시 과거를 돌이켜봐야 한다. 세상은 항상 과거를 닮아 가기 때문이다. 모든 세상사는 과거든 현재든 똑같은 열정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 창조되고 생명을 얻게 되며, 결국엔 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

최근 우리 한반도와 주변국 상황을 둘러보면 마키아벨리의 통찰이 얼마나 설득력을 갖고 있는지 새삼 감탄하게 된다. 최근 우리 한반도는 '불운하게도' 신냉전 체제의 각축장으로 변해 가고 있다. 무력전쟁을 촉발한 일본. 시도 때도 없이 미사일

을 발사하는 북한. 한국의 영공을 침범한 중국·러시아. 그리고 한국을 꼭두각시로 만들려는 미국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위험 요소들이 한꺼번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물론 한반도 주변을 감도는 이들 위협은 별안간 생겨난 것은 아니다. 우리 역사에서 거의 변하지 않고 있는 것도 역사가 반복되는 배경으로 꼽힌다.

해결은 1832년 '역사와 철학에 관한 강연'에서 '역사와 경험의 가르쳐 주는 것은, 민족과 정부가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거나 원칙을 끌어내고 그에 따라 행동했던 적이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금 우리 민족과 정부는 국내 정치 싸움에 몰두한 나머지 국방과 국가의 안위를 잊어버린 것은 물론, 지난 세월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견디고 이겨 내며 체득한 '역사와 경험의 교훈'까지 노리에서 지워 버린 것처럼 보인다. 해결의 아픈 지적을 되새겨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홍행기 정치부장 redplane@

잊어버린 역사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政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刊(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1월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직구)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편집부 220-0649 정치부 220-0632 경제부 220-0663 사회부 220-0652 전남본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문화부 220-0661 체육부 220-0633 예향부 220-0692 사건부 220-0694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무국 220-0551 (FAX 222-0195)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